

미래적금 vs 도약계좌… 청년 정책금융상품 선택 기로

내년 ‘청년미래적금’ 첫 출시
청년도약계좌 신규가입 중단
납입기간·금액 따라 손익 갈려
소득구간별 유불리 비교 필요

이재명 정부의 청년정책금융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내년부터 출시된다. 청년미래적금 출시와 함께 ‘청년도약계좌’의 신규 가입은 중단된다. 두 상품 모두 금융권 상품 대비 금리가 높지만, 중복 가입은 불가해 소득 요건이나 납입액 등 요건을 꼼꼼히 살펴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청년의 취업 및 근로활동,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지난 10일 발표했다. ‘첫걸음 보장제’에는 미취업 청년 DB구축, 청년 취업 패키지 지원 등 일자리 지원 방안과 함께 내년부터 판매되는 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포함됐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적립하면 만기 시 최대 220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미래적금’ 출시를 포함한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소개하고 있다. /뉴시스

할 수 있는 ‘일반형’과 중소기업에 새롭게 취업한 청년을 위한 ‘우대형’으로 나눠 출시된다.

‘일반형’은 가입 은행에서 제공하는 상품 기본 금리에 더해 납입액의 6%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매달 50만원을 입금하면 만기 시에 2080만원을 받게 된다. 금융권 적금 상품과 비교하면 연 12%의 적금 금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우대형’은 중소기업에 신규 입사한 청년이 입사 6개월 이내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일반형의 2배에 해당하는 12%의 정부지원금을 제공한다. 매달 50만원 납입 시 만기에 2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권 적금 상품과 비교하면 연 16.9%에 해당하는 금리다.

청년미래적금은 내년 상반기 중 출시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후속 상품으로 출시되는 만큼 중복 가입은 불가하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이 희망하는 경우 청년미래적금으로 상품을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선부른 청년도약계좌 해지에 유의해야 하는 이유다.

오는 12월까지 가입이 가능한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최대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청년미래적금과 비교해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이자액은 더 많지만, 가입 기간이 길고 납입액도 더 많다.

우대형 청년미래적금은 모든 소득 구간에서 청년도약계좌보다 우위에 있지만 일반형은 소득 수준에 따라 유·불리가 바뀐다. 청년도약계좌는 연 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에 일반형과 같은 6%의 정부지원금을 제공하는데, 납입 한도는 더 높다. 또한 중도 해지 가능성이 작다면 가입 기간이 긴 청년도약계좌가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청년미래적금은 연 소득 6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청년도약계좌는 75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내년 청년미래적금 출시와 함께 청년도약계좌의 신규 가입이 중단되는 만큼, 올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이후 내년에 갈아타기 여부를 결정하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했으나 최근 청년도약계좌를 재가입했다는 한 청년은 “기존에 불가피하게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했지만, 내년부터는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에 재가입했다”라면서 “내년에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되면 조건을 살펴보고 갈아타기 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금융위·금감원

예적금·카드포인트 등 숨은금융 찾아가세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全) 금융권과 함께 금융소비자가 ‘숨은 금융 자산’을 보다 간편하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숨은 금융자산’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보험금, 투자자예탁금(증권계좌), 신탁, 카드포인트 등 금융자산을 말한다. 올해 6월말 기준 전체 숨은 금융자산 규모는 18.4조원으로 집계됐으며, 그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예·적금 계좌의 존재를 잊거나 보험의 만기에도 수령하지 않는 등 ‘숨은 금융 자산’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한다. 특히 예·적금, 보험금 등 금융자산은 만기 이후 적용금리가 점차 감소하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구조로, 만기 도래에도 찾아가지 않으면 채투자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게 되고 장기 미사용 상태를 악용한 횡령 등 금융사고에도 노출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7주간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 기간 동안 금융회사는 대고객 개별 안내와 온·오프라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숨은금융자산 조회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안승진 기자

당국 ‘보험개혁’ 시동… 수수료·채널·통제구조 새판짜기

초기판매 억제, 유지보상 강화
GA위험평가로 자본비용 연계
방가 규제 합리화 선택권 확대

보험상품 가입의 불편과 정보 비대칭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면서 금융당국이 영업시장 ‘신뢰 회복’과 ‘경쟁·혁신’에 방점을 찍은 보험개혁을 추진한다. 수수료 중심의 유인 구조를 ‘초기 판매’에서 ‘장기 유지’로 돌리고 채널·내부통제·정보공개까지 영업 전반의 규칙을 손본다는 계획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진행한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정리했다. 목표는 영업시장 신뢰 회복과 공정경쟁, 소비자 선택권·장기유지율 제고다.

핵심은 수수료 체계다. 당국은 계약 초반 과도한 선지급을 제한하고 최대 7년 범위에서 매월 나눠 주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했다. 한도는 계약체결 비용의 0.8% 이내로 5~7년차에는 매월 0.4% 이내 ‘장기유지수수료’를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설계사 보상

구조를 ‘초기 일시’에서 ‘유지 성과’ 중심으로 전환해 해지·전속 이동 유인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로드맵도 제시됐다. ▲2026년 1월 수수료 공시와 과다 사업비 제재 ▲2026년 7월 GA 소속 설계사에 1200% 룰 적용 ▲2027년 1월 4년 분급 ▲2029년 1월 7년 분급 등으로 확장하는 단계안이다. 수수료 비교공시, 상품위원회 역할 강화, 공동비용 구분집행 등도 순차 반영된다. 업계는 일정에 맞춘 보수체계·상품·채널 전략의 재정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인보험대리점(GA) 관리 틀도 바뀐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GA 모집위탁 리스크 평가를 위해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세부 가이드라인·평가·인센티브·페널티 체계를 마련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위탁한 GA의 ‘판매품질’(불완전판매·유지율·민원·정착률·선지급률·환수율)과 보험사의 ‘판매집중’ 위험(특정 GA 쏠림, 취약 GA 비중)을 묶어 회사별 ‘운영위험 평가등급’을 매기고 지급여력비율(K-IC S) 요구자본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

다. 위탁채널 선정·관리 역량이 곧 자본 비용으로 연결된다는 의미다.

대형 GA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의무화, 준법감시 지원조직 최저인원 도입, 임원 결격기간 3→5년 강화, 영업보증금 상향(최고 3억→5억원) 등 판매책임 장치를 촘촘히 했다. 표준위탁계약서에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 발생 시 보험사의 구상권을 명시해 책임의 선을 분명히 했다.

채널 측면에서는 방카슈랑스 ‘판매비중’ 규제가 합리화된다. 참여 회사 수에 따라 한도를 50%(4개사 이상), 75%(4개사 미만)로 차등해 독점을 막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운영한 뒤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손해보험사의 이탈로 방카슈랑스 참여사가 급감해 기존 규제가 현실과 어긋났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금융당국의 보험개혁 배경엔 왜곡된 유인과 낮은 유지율이 있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개혁회의 내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IFRS17(보험회계 기준) 도입 이후 신계약 창출 압력이 커

지면서 사업비 지출 확대 유인이 작동했지만 소비자 후생 지표인 장기유지율은 여전히 취약하다. 생보의 13회차 유지율은 88.2%지만 61회차는 43.3%로 급락한다. ‘초기 판매’에서 ‘장기 유지’로의 보상축 이동이 필요한 이유다.

소비자 측면에서도 개선 요구가 뚜렷하다. 금융상품 가입 과정이 어렵다는 응답에서 ‘보험’이 62.4%로 가장 높았는데 과다·부족·진위 확인 어려움 등 정보획득의 어려움과 낮은 판매자 신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개편의 ‘정보공개·비교가능성’ 강화는 이런 인식과 직결된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 개혁회의를 통해 제시된 제도개선안은 개별 판매자를 비롯한 영업조직과 소비자의 행동, 그리고 시장구조 변화를 촉발할 것”이라며 “보험사는 변화가 예상되는 영업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다 기민한 의사결정을 해야하고 금융감독당국은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우리은행, 국민연금기금 우협 선정

13개 정량·정성 지표 높게 평가
1순위 국내 수탁은행으로 선정

우리은행은 국민연금공단 국내 수탁은행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금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수탁은행을 지정한다. 국민연금 적립액은 총 1200조 규모로,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다.

우리은행은 이번 평가에서 재무 안정성 등 13개의 정량·정성 지표에서 ▲안

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전산·결제 시스템 ▲글로벌 수준의 리스크 관리 체계 ▲국내외 금융 네트워크 및 인프라 역량 등을 높게 평가받아 1순위 수탁은행으로 선정됐다.

우리은행은 이번 재선정을 계기로 국내를 넘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수탁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선진 자산관

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지난 18년간 국민연금의 전 기금자산 수탁 업무를 수행한 유일한 은행”이라며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은성산업·은성건설은 경북 고령군 다산면 좌학리 일원에 ‘다산월드메르디앙센타하이’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9층, 3개동, 전용면적 74~121㎡, 총 463가구 규모다.

GS건설은 경기 광명시 철산3동 일원에 광명12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철산역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7층~지상 최고 29층, 19개동, 2045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39~84㎡, 총 65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전지원 기자 jjw13@